

통 일 의 길

제 3 호

국 토 통 일 원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목 차

1. (전통문화)
찬란한 민족문화의 창조5
2. (민주주의 해설)
한국민주주의 성격(1).....21
3. (공산주의 비판)
공산주의 경제이론과 실제.....33
4. (통일을 위한 사명)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그 허구성47
5. (정부시책 소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65
6. (북한실정)
북한의 농촌71
7. (남북회담 소식)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87

찬란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조(創造)

1. 문화의 개념(概念)

문화란 일반적으로 자연에 반대되는 말로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조화(造化)하고, 형성(形成)하며, 개발(開發)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화를 물질적인 문화와 정신적인 문화로 나누고 있으며, 물질적인 문화를 문명(文明)이라고 한다.

물질적 문화라함은 기구, 의류,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죤」 등의면적, 물질적인 산물을 말하고 정신적 문화란 언어, 문학, 예술, 종교, 도덕, 민족가치, 전통 등 정신적 내면적인 산물(產物)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를 건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 문화와 물질적 문화를 분리하여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태면 의복이라고 하는 물질적 문화의 도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많은 정신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옷의 모양, 본인의 성격, 국가적 민족적인 상징과 관습 등 수많은 정신적 요소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신적 문화와 물질적 문화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 생활에서 정신과 물질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같이 모

든 문화의 양식속에서도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서로 보충 융합되어야만 건전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문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신적인 면보다 오히려 물질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 같다. 그래서 「슈바이처」박사는 그의 <문화와 윤리>라는 책에서 『물질적인 발달 뿐으로 정신적인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문화는 마치 키를 잃은 배와 같이 빨리 달리면 달릴 수록 조난을 당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경고한 바 있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두가지 형태를 살폈는데 이것은 모두 인간활동의 산물이며 이는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개인과 문화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이 때로는 문화를 파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된다.

한 사회 전체가 단 하나의 문화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구성원이 다양함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문화형(文化型)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는 보편성(普遍性)과 특수성(特殊性)을 함께 가지고 있다.

문화가 이와 같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세계성을 띤다. 이를테면 종교의 예를 보더라도, 종교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결코 훌륭한 종교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미술에 있어서도 어떤 한민족에게만 아름답게 보이는 미술작품은 결코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아무리 보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

제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특수성이다. 따라서 문화는 그 하나 하나에 제각기 다른 독자적인 정신의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그의 독특한 양상(樣相)들을 통해서 제각기 다른 특수성을 나타내 주며, 고귀한 인간의 「얼」을 드러내 준다.

내가 「나」라고 할 때에 그 나는, 이에 「아무개의 아들이요 딸」인 것 처럼, 어느 한 민족의 구성원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도 민족의 전통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며, 그를 발판으로 하여야만 창조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역사라고 말할 때의 그 역사도 그저 시간의 경과라는 것에 참다운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창조에 의하여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가 고취되고 추진될 때 그 민족의 구성원인 각 개인은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있게 되는 것이며, 이같은 민족문화의 융성을 떠나서는 세계문화도 그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한국 문화의 성격(性格)

한국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통일성(統一性), 종교성(宗教性), 대중성(大衆性)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문화의 통일성(統一性)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문화의 창조자인 우리 민족은 인종(人種)에 있어서나 언어(言語)에 있어서나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민족이 단일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같은 핏줄기를 이어왔으며, 같은 의식속에서 함께 생활해 왔고, 우리에게 알맞는 단일한 문화를 창조해 왔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어떤 색다른 문화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여 흡수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의 구성이 다양한 나라는 그 다양한 민족이 지녀온 문화가 각각 다르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가 외부의 문화를 소화 흡수하는 양상도 다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의 단일성과 이에 따른 민족문화의 단일성은 외래문화의 흡수, 소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 통일성을 지녀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족문화의 단일성은, 역(逆)으로,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단일화되지 못한 민족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민족문화의 종교성(宗敎性)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중국의 고대 문헌(文獻)에서도 우리 겨레의 무집했던 종교행사를 기록한 사실을 볼 수 있거니와, 요즈음 민속신앙조사(民俗信仰調査)에 의하여 발굴되는 수많은 종교 유산들은 우리 문화의 종교적인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인명(人名)이나 지명(地名) 그리고 옛무덤의 벽화는 물론 고궁(古宮)과 사찰(寺刹)의 기와나 주춧돌 하나 하나에도 종교성을 물씬 물씬 풍겨주는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가 정치나 경제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접근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유산의 종교성을 돌아 볼 겨를이 없었지만, 우리 문화 유산의 대부분이 종교적 동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우리 문화 유산은 세계 어느 민족의 그것보다도 종교성

이 강하게 내포(內包)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 유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그 종교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가 되기 쉽다. 예컨대, 종교적 동기를 무시해 버리고 고구려 고분(古墳)의 벽화를 기교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들잔치에 들맞은 애기를 제쳐놓고 둘러앉은 손님이나 차려진 음식만을 강조하는 우스운 꼴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겨레의 시조신화(始祖神話)인 단군신화에서 단군이란 말이 이미 우리의 무속신앙(巫俗信仰)인 무당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화랑도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포용성있는 불교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우리의 역사를 빛내게 해주는 고구려의 고분벽화, 불국사의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이 모든 문화 유산들이 모두 우리 조상들의 지극한 종교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우리 문화의 종교성을 새삼스러이 되새겨 둘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로, 우리 문화의 대중성(大衆性)에 대하여 살펴보자.

경주(慶州) 남산(南山)에 있는 벽화가 그 예술적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국내의 사계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터이지만, 놀라운 점은 이 벽화를 남긴 주인공들의 대부분들이 일류 화가가 아닌 평범했던 신도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들 벽화는 일류 화가들의 세련된 기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품들이 아니라 평범한 신도들의 지극한 신심(信心)에서 우러나온 신품(神品)들이었다. 따라서 대체로 기교보다 지극한 정성이 이같은 우수한 예술품을 창조하는神通力(神通力)으로 등장했던 점이 우리 문화 유산들에 내포되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 이외에 별다른 조건을 구비할 수 없었던 일반

서민들이 문화창조 대열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 겨레의 고유한 성격을 담아온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는 외래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점차 서민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유문화의 성격은 더욱 더 서민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3. 민족문화의 창조(創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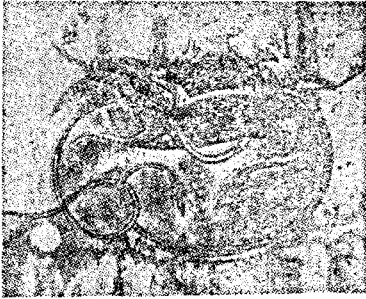
옛부터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어질고 착한 이웃나라이니, 군자(君子)의 나라이니, 또는 예의(禮儀)가 바른 국민이니 하면서 추앙(推仰)한 것은 결국 우리 민족문화가 우수한 것을 이룬 말이다. 인류학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의 선천적인 우열(優劣)은 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민족 사이에 문화적인 우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도 큰 관계가 있지만, 민족적인 노력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은 결국 우리 민족의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불교는 미술, 건축, 조각, 공예 등 우리 민족문화에 깊이 침투하므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창작성을 발휘하여 민족문화를 형성케 하였다.

이들때면, 고구려의 승려 담징(曇徵)이 그린 일본 법통사(法隆寺)의 금당벽화(金堂壁畫), 신라의 금관(金冠), 석굴암 등도 모두 이에 속한다.

고구려 예술의 모습은 그들이 남긴 독창적인 석실분묘(石室墳墓 : 돌로된 무덤)와 이러한 분묘의 벽에 새겨진 벽화(壁畫)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벽화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현리(遇賢里) 대묘(大墓)의 사신도(四神圖 :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이다. 패기

에 넘치는 선(線)의 묘사나 색채의 조화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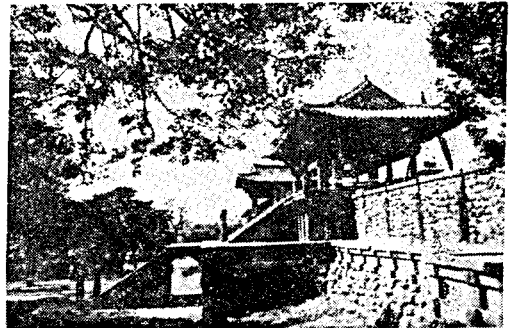
현무도(玄武圖)(강서 고분 사신도 중의 하나)

것 같은 박력을 느끼게 하고, 바로 눈앞에 말을 달리는 고구려 무사의 썩썩한 모습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백제의 고분벽화는 고구려의 것에 비하여 훨씬 우아한 맛을 지닌 것이 특색이다.

또한 신라에는 솔거(率居)와 같은 유명한 화가가 있으며, 오늘날 그의 작품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으나, 그가 황룡사의 벽에 그린 노송도(老松圖)는 너무도 실물 같아서 날으던 새가 앉다가 머리를 부딪쳐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 온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출토되어 우리가 잘 듣고 보는 바와 같이 신라의 금관, 금대, 금지환 등은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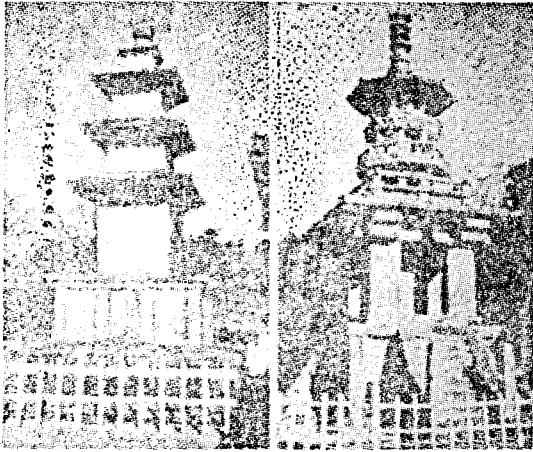
통일 신라의 문화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토대로 하여 삼국의 높은 문화유산을 집대성한데 그 특징이 있다.

뛰어난 건축기술과 고상한 미적 감각으로 저절로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주의 불국사(佛國寺)와 석굴암(石窟庵)이다.



불국사 전경

불국사는 원래 2,000년이 넘는 큰 사찰이었으나 목조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현재는 석조건물만 남아있다.



석가탑

다보탑

이 불국사에는 대웅전 말고도 석등, 백운교, 청운교 그리고 정밀하고도 건축미의 극치 이루고 있는 석가탑이나 다보탑등이 있어 신라인의 미적인 감각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석굴암에는 석가상을 비롯하여 그 들레의

벽에 조각되어 있는 십일면관음보살 및 나한(羅漢) 그리고 금강역사(金剛力士)와 인왕(仁王), 사천왕(四天王) 등 모두가 제각기 특색을 살린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 설계는 기술적으로 교묘할 뿐 아니라, 역학적으로도 튼튼하여 현대의 건축학이 따를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신라의 건축가나 조각가의 미적 감각이 매우 높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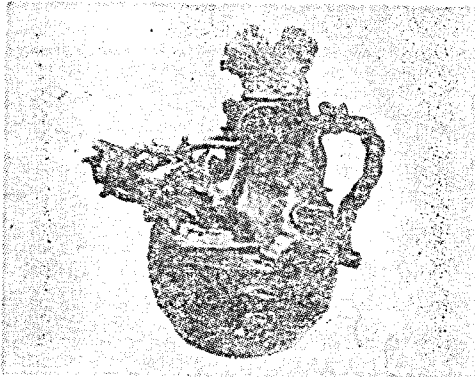


십일면 관음보살상(석굴암)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불교는 민족문화의 창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려 초기의 불교는 대장경(大藏經)의 조판에 이르러 하나의 정리(整理)를 이룩했다.

현종(顯宗)때 착수하여 문종(文宗)에 이르러 완성된 대장경의 조판은 불교의 힘으로 외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고려 국민들의 호국정신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경판은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고, 현재 해인사에 있는 소위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고종(高宗) 때에 강화도에서 재주조한 것이다. 전란 중에 이룩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정확함과 글자 모양의 아름다움과 제작의 정교함은 동양에서 개판(開板)된 20여종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유교와 불교의 융성에 따라 각종 서적이 널리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청자(비룡주전자)

목판 인쇄는 물론이거니와 한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에 벌써 금속활자(金屬活字)가 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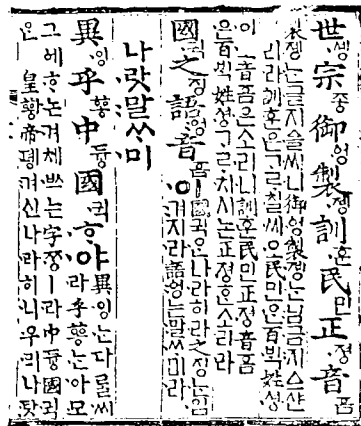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금속활자의 발명은 서양에서 처음으로 활자가 나타난 1450년보다 무려 226년이나 앞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한 우수한 민족인 것이다. 또한 고려 문화 중 가장 손꼽히는 것이 고려자기(磁器)다. 특히 청자(靑磁)의 그 은은한 색깔, 우아한 형태, 아름다운 무늬 등은 후세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승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라이샤워」라는 교수의 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담국색의 고려 자기들은 우아한 형태를 갖고 백색이나 회색토(灰色土)의 상감(象嵌)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넣고 있는데, 고려 자기를 자극했던 송나라의 자기와도 아주 다른 풍취를 보여 준다. 고려 자기는 중국에서도 극히 숭상되었으며, 도자기 기술에 있어서 세계에 일대 승리를 이룩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이룩한 문화의 업적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먼저 이조 초기의 위대한 문화적 업적으로서는 무엇보다 한글의 창제를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 쓰는 말에 부합되는 민족의 문자가 있어야 하겠다는 민족의식과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배워 쓰게 해야겠다는 민족애(民族愛)가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이 한글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러한 한글의 창제는 한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사에 길이 길이 빛날 위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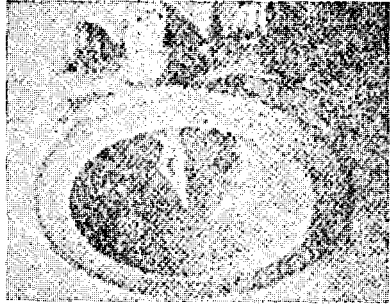
훈민정음(언해본)

또한 이조 초기에는 과학과 기술면도 크게 발달하여 여러가지 과학적인 발명을 이룩했다.

특히, 측우기(測雨器 : 강우량을 관측하는 기계), 대소간의(大小簡儀 : 천문관측기), 앙부일영(仰釜日影 : 해시계), 자격루(自擊漏 : 물시계) 등을 발명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측우기의 발명은 「이탈리아」의 「가스텔리」라는 과학자가 발명한 것 보다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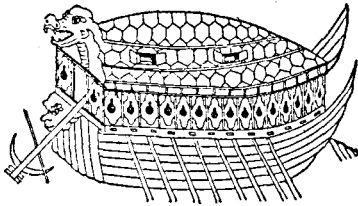
죽우기



앙부일영

2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조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곳에도 이용 되므로써 민족전통과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거북선 모형도

즉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북선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거북선은 배위에 거북 잔등같은 쇠뚜껑을 덮어 적의 화살이나 총탄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게다가 송곳을 꽂아서 적의 접근을 방지하도록 만들어 졌다. 또 선체 주위에는 대포를 쏠 수 있는 포구(砲口)를 만들어 놓아 이편에서 자유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쨌던 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鐵甲船)이라는 것에 또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이다.

즉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북선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거북선은 배위에 거북 잔등같은 쇠뚜껑을 덮어 적의 화살이나 총탄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게다가 송곳을 꽂

또한 이조시대 공예품으로는 백자(白磁)가 있었다. 초기에는 분청(粉靑)이라 하여 회청색(灰靑色)이 도는 퇴화된 고려자기 같은 것을 만들었으나 뒤에 가서는 독창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고

러청자의 가냘픈 곡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소박하고 순후한 직선적인 형태로 변하였다. 특히 순수한 하얀 빛같이 나는 순백(純白), 우유빛 같은 유백(乳白), 갯빛 색깔의 회백(灰白) 등 약간씩 다른 백색을 지니는 자기는 이조 자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이 백자는 임진왜란 때에 큰 수난을 겪었으며, 이때 일본으로 붙잡혀간 도자기공들에 의하여 일본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고 한다.



조선 시대의 백자

그 밖에 학문에 있어서도 무조건 중국의 학문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독창적인 체계로 발전시킨 점도 있으며, 중국 학자보다도 오히려 훌륭했던 학자들도 많았다.

우선 이퇴계(李退溪)의 학문에 있어서도, 그의 저서인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일본에 까지 전하여져서 일본의 한 학자는 이 책을 읽고 퇴계선생을 숭앙하여 퇴계의 학문을 강의하였으며,



이 황



이 이

또한 『한국의 이퇴계는 그 학식이 깊고 넓음이 원(元)나라나 명(明)나라의 유학자들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찬탄했던 것이다. 이이의 에도 지동설(地動說)을 연구한 박지

원(朴趾源), 김석문(金錫文) 등 우수한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켰던 우리의 선조들과 이들 선조들이 남겨준 민족문화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만이 우리의 민족문화는 더욱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4.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수용(受容)과 우리의 태도(態度)

우리 민족문화의 위치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닦아 놓은 토대 위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보전은 물론 광범위한 외래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수용된 외래문화를 우리의 선조들이 가꾸어온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서 주체성을 살리면서 한국적인 것으로 소화 흡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우리 민족문화가 유교나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룩된 것이므로 순수한 한국의 민족문화는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원래 문화는 이동(移動)과 복합(複合)으로 생성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문화에서 「순수한 한국적」인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유교나 도교(道敎)도 중국인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중국의 도교는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고유의 사상이라고 하는 신도(神道)에도 다분히

도교적인 영향이 짙다는 것이 그들 일본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인도 문화는 인도 문화대로, 중국 문화는 중국 문화대로, 또한 일본 문화는 일본 문화대로 제각기 자기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선진국가의 문화일지라도 하나같이 전부 외래문화의 요소를 건전하게 섭취하는 데서 커다란 발전과 진보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문화 역시 외래문화(유교나 불교등)의 요소를 수용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소화되어 재창조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국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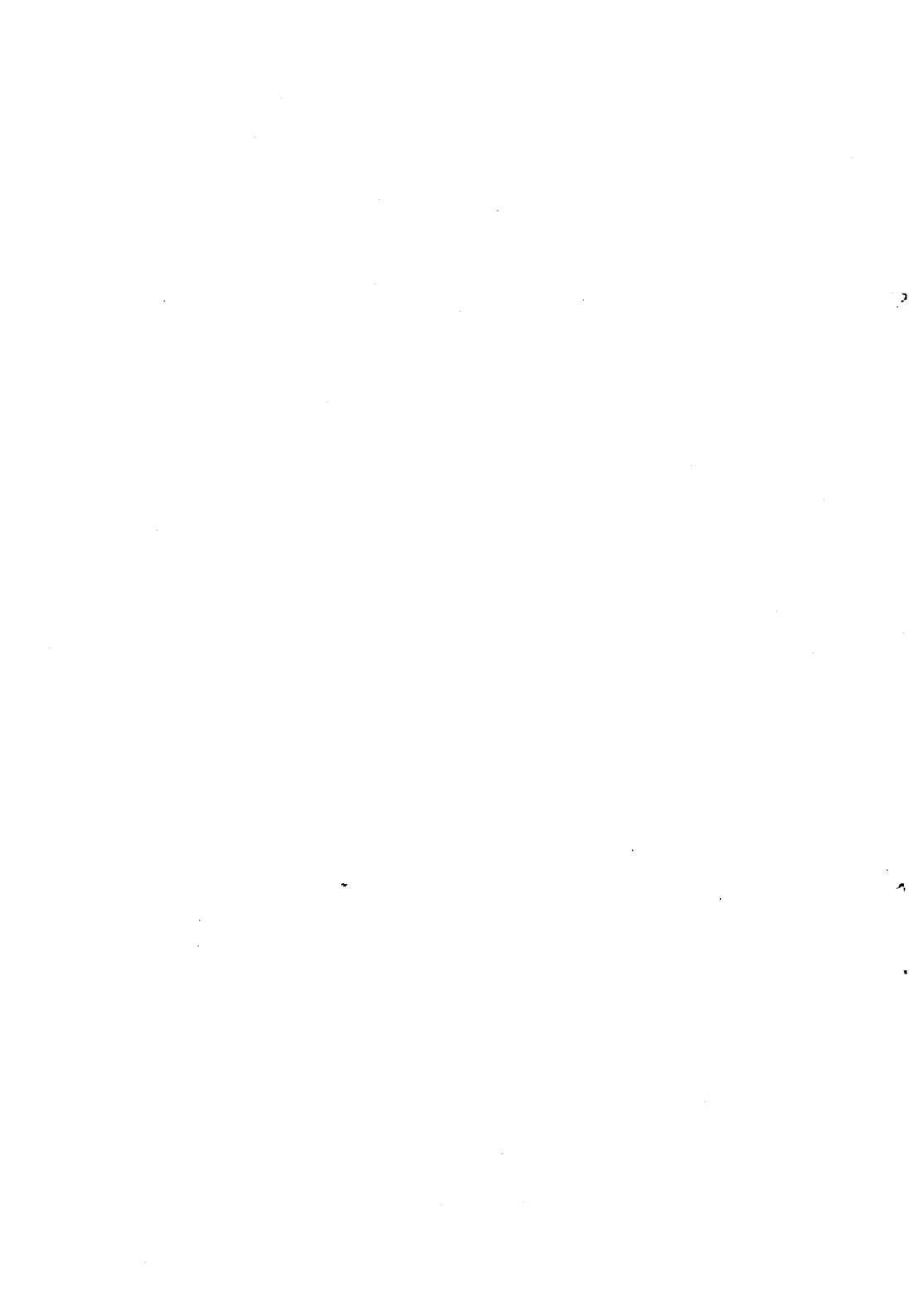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러한 외래문화의 수용과정에서의 문제는 외래적인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여 자체의 문화와 전통에 융합시켜 섭취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얼마만큼 가치있게 활동하여 자체의 창의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방후 우리 사회에는 외국 문화와 문물을 숭상하여 무조건 따르는 풍조가 일어났다. 만일 이러한 서구 문화의 수입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주체의식이 확립된 가운데 이루어 졌다면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찬란한 문화의 창조는 온갖 모방으로 성취할 수는 없으며, 우리 자신의 문화를 우리 아닌 다른 나라의 힘으로 창조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의 선진국의 문화, 사상, 과학기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민족적 주체성이라는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여 흡수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창조에 의하여 나의 조상을 빛내고 우리 모두가 활기를 찾는 날 거기에는 찬란한 민

족 문화의 주체성이 저절로 확립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만
이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전통과 금지에 오욕을 남기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 (1)

1. 머리말
2. 10월 유신의 의의
3.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



자유의 여신상

1. 머리말

우리 민족이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해방이라는 계기를 통해서였다.

즉, 36년간 일제의 식민지 정책 밑에서 온갖 탄압을 다 받아오던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해방은 감격적인 것이었으며, 이같이 감격적인 선물을 준 연합국 특히 미국은 더없는 은인이었고, 그들의 제도나 생활양식은 신기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여졌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가원수 아래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고, 물질적인 풍요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다 도도하던 일본이나 독일을 굴복시킨 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 건설하는 국가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어야 한다는 데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은 숭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유지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성년한국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년기에 접어든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립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부르짖기에 이른 것은 우리의 민주정치의 역정(歷程)이나 경제발전이 순탄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더우기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체질이 너무도 약했고, 우리의 짐이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사회제도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가. 제도만능의 환상과 비능률

우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의 하나가 제도(制度)만 좋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리라는 그릇된 생각이다.

건국 초부터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우수한 제도를 갖고 수립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수한 제도가 곧 모든 국민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각종 선거를 통해 국민등의 정치참여는 증대되었지만 공약(公約)이 남발되고 권모술수(權謀術數)가 횡행(橫行)되며, 매수(買收), 선심공세(善心攻勢)로 거대한 자금이 탕진되고 그 결과 선출된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서 쓰여질 선거자금을 확보하고 선거구민들에 대한 체면 유지 때문에 국사(國事)를 돌보기 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거때마다 심각한 분열(分裂)의 양상이 나타나 불안정한 주위 상황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기의식(危機意識)을 느끼게 하였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국정(國政)은 심한 비능률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행정부 공무원들은 선량들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능이 마비되다 시피하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명랑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무사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폐단은 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선거때마다 국민앞에 내세우는 정견(政見)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야 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행정부 전체 또는 어느 특정 공무원의 무능이나 실책으로 돌려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와 같은 화려한 공약이 정부나 공무원의 무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관념화(觀念化)하게 되었다. 이같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은 마침내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큰 거리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치풍토 속에서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는 사람은 무시되고 오히려 사이비 정치이론을 펴고 패를 지어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행세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능

력이나 경험 그리고 역사적인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국민이 그대로 채용했다고 해서 그 제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생산성을 그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나. 개인적, 관념적 자유의 범람(氾濫)과 부조화(不調和)

오랜 억압 밑에서 너무도 자유의 맛을 보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란 말처럼 행복의 환상을 준 낱말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가 자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자유의 무질서한 행사가 궁극적으로는 보다 큰 자유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안일(安逸)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犧牲)시키고, 법망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부도덕하며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국가 이익에 역행하고 국민의 단결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이같은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성질 즉 자유와 책임의 균형 그리고 개인적 자유와 전체적 자유의 조화를 망각한 가운데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자유의 무책임한 남용은 분열(分裂)을 초래하고, 항상 불만(不滿)과 부조화(不調和)가 떠도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유능하고 성실한 일군도 비방과 야유의 대상이 되고, 성실하다는 말 그 자체가 멸시를 수반하는 비생산적(非生產的)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참다운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빈곤과 낭비

해방 후 우리 민족의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소비성향(消費性向)의 증대(增大)이다.

이에는 6·25사변 같은 전쟁의 경험, 계속적인 화폐가치의 하락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우리 국민이 어느덧 순간 순간만을 생각하고 즐기는 찰나주의적인 생활태도를 익히게 된 데에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성향의 증대는 우선 유통구조(流通構造)의 비대(肥大)를 초래했고, 또한 착실한 생산활동에 자본을 투자하는 자(者)보다 투기적으로 유통구조에 투자하는 자(者)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하여 1960년대까지 기간산업(基幹産業)은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원시산업(原始産業)이나 「서비스」산업만 비대해진 기형적인 산업구조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재정도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지탱되었고 밖에 내놓을 만한 국산품은 거의 없었다. 또한 농토의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었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무조건 집중되므로써 농촌은 더욱 외면 당했다.

여기에다, 사치와 낭비의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고, 빈부의 차이는 더욱 심해져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성실과 근면과 검소한 생활태도로 자본주의를 성장시켰던 서구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서구인들이 만든 비싼 소비물자를 얻어다 쓰면서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또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기반 위에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성숙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라. 가치관의 혼란과 세대 단절

해방 후 우리 민족에게 부닥친 또 하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세대간의 단절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물밀듯이 들어온 서양의 문물 앞에서 기성세대(既成世代)가 가진 모든 것은 봉건적이란 이름으로 부정되어 버렸다. 가정에서의 질서(秩序), 스승과 제자간의 경애(敬愛), 이웃간의 정(情誼), 친구간의 신의(信義)도 모두 빛을 잃어 버렸다.

아버지와 자식이 1대 1의 발언권으로 가족회의에서 맞서고, 부부간에 서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오인되었다. 스승을 돈을 받고 글을 가르쳐주는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풍조가 횡행하게 되었다.

애국이니 조상숭배니 하는 것은 한갓 노인들의 감상적인 잠꼬대로 생각하고 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새세대와 구세대간에는 이어질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겨난 것이다.

국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상이 남긴 문화를 업신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서, 외래 문화를 무조건 좋아하고 숭배하였다.

이와같은 가치관의 혼란과 세대간의 단절은 이 사회를 불안정하고 불신과 불만에 찬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 우리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었던 여건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우리는 자신들의 생활전통과 국민적인 체질과 환경조건에 밀착되지 않은 제도는 어떠한 경우도 토착화(土着化)를 기할 수 없고, 국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뒷받침이

없이 어떠한 제도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2. 10월유신의 의의

가. 민족중흥에의 의지

한국 민주주의(韓國民主主義)의 실천(實踐)은 확실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전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10월유신은 이같은 새로운 역사의 전개 앞에서 민족사(民族史)의 방향을 설정(設定)하고, 그 위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족의 일대(一大) 창조적 운동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삼국시대의 민족통일과 같은 역사발전을 통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유신의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그러나 유신이라는 이름을 직접 내걸고 국민적인 총력을 기울여 새로운 역사를 추진하려는 민족적 운동을 전개한 것은 4천년의 역사 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10월유신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유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역사의 창조(創造)이며, 동시에 민족적인 개혁(改革)이다. 그러나 유신은 파괴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서구적인 혁명(革命)과도 틀리며, 또한 지도자들의 강요에 의해 부분적인 개혁을 피하는 동양적인 경장(更張)과도 다르다.

따라서 유신은 지도자와 국민이 다 같이 새로운 역사 앞에 참여하는 총화적 개혁(總和的 改革)이라는 특징과, 민족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라는 주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창조(創造)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유신은 첫째로, 역사 앞에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창조한다는 국민적 통합(統合)의 의미와 둘째로, 이제까지 의세의 침략에 의해 얼룩졌던 역사의 제약(制約)이나 단절(斷絶)을 극복하고 자기의 역사를 다시 찾는다는 역사회복(歷史恢復)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오늘의 유신을 4천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저력(低力) 위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며, 30년간 체험한 서구적 민주주의의 비능률을 극복하려는 예지(叡智) 위에서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신과업(維新課業)은 바로 통일된 민족사를 실천하며 참다운 근대국가(近代國家)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의지로 직결된다.

나. 민족역량(民族力量)의 집결(集結)

이와같은 유신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총화(總和)와 올바른 역사의 방향(方向)이 요구된다.

그것은 해방 이후 분단이라는 비극과 여러가지 사회적 모순에 시달려온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새로이 설정된 역사의 방향으로 민족적인 총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도저히 오늘날과 같이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최초에는 급진적인 혁명에서 이루어지지만 일단 상황이 안정되고 부(富)가 확보되면 인간의 불행을 최소로

막아주면 된다는 소극적인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이같은 서구적 민주주의의 모방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한 우리 한국민의 최대의 민족역량 집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유신은 무엇보다도 우선 서구식 민주주의가 지닌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에 최대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적인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한 최대의 민족역량의 집결이 필요하며, 이러한 민족역량의 집결은 구심적(求心的) 지도력이 있음으로써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별적인 자유가 범람하여 왔고, 여론의 일치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심적인 지도력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다음의 두가지 점을 배워야 한다.

즉 하나는 지도자 중심의 민주주의 개념이 바로 우리의 전통과 연결되는 동양적인 민주주의의 본질이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지도자 중심의 민주주의는 지도자 때문에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룩되는 역사나 그 역사를 통하여 실천될은 민족의 행복 때문에 주장된다는 점이다.

다. 창조적 자유(自由)

서구적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실천보다는 제도의 운영, 지도자 보다는 대중을 더 앞세움으로써 제도적인 평등을 외형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또한 권력은 적을 수록 좋다는 주장 아래 철저한 권력분립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들도 합리적인 제도보다 더 긴급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권력의 집중 및 국가행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 집중의 현상에서 권력의 집중과 대중의 행복 간에는 상호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권력의 집중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관건이 곧 지도자의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유신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민족적 요구로서 권력의 집중이나 어느 한 지도자의 계속적인 구심력이 필요할 때,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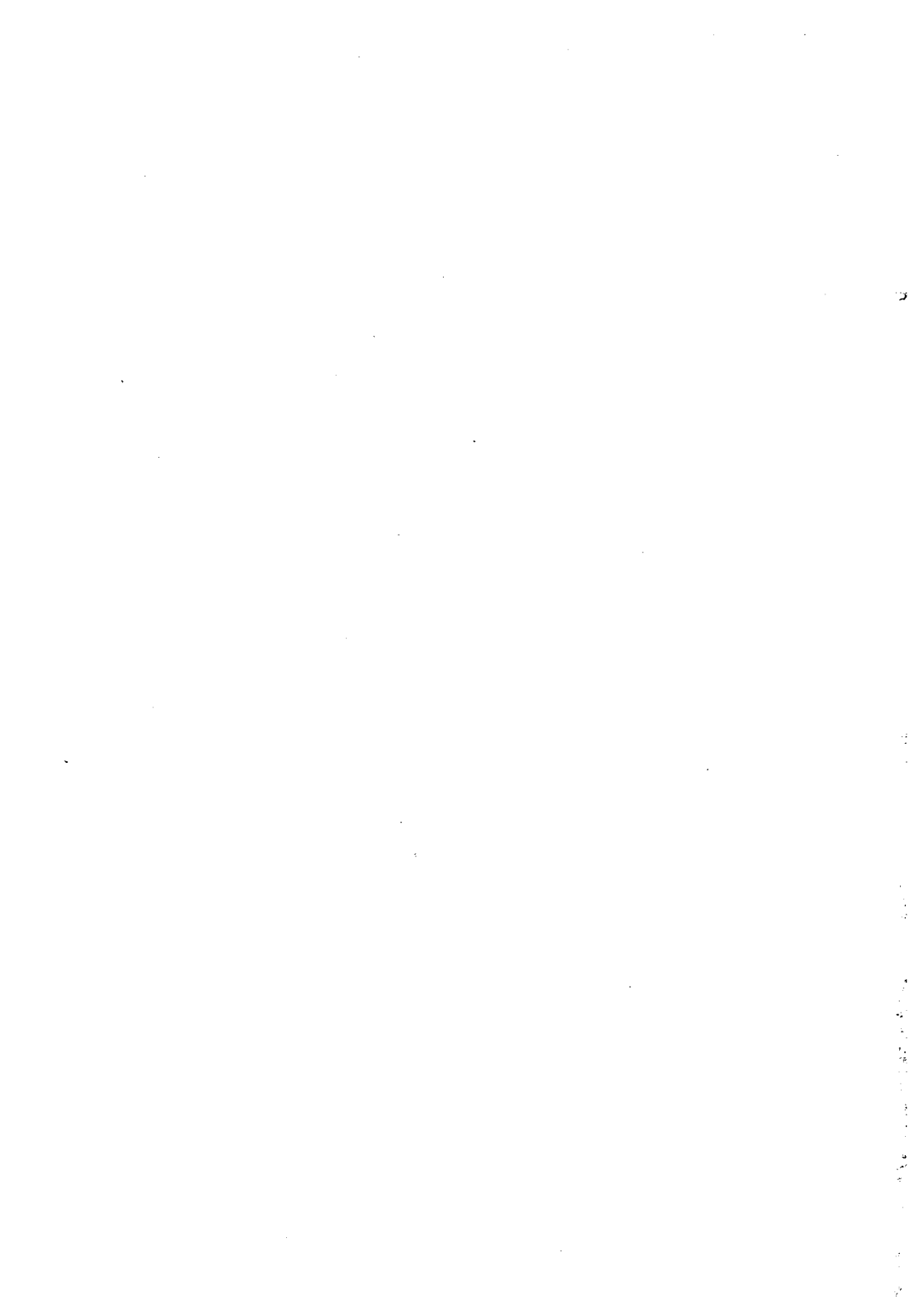
만약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의해서 이같은 역사적 요구에 대한 국민적인 선택권이 포기되어야 한다면, 이것 자체가 자유에 대한 제약(制約)이며,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한 민족이 가지는 창조력에 대한 제약인 것이다.

물론 역사상 구심력있는 지도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손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구심력있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구심력있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길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확대된 자유의 개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원래 제도의 합리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의해서도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걷고 있는 역사 위에서 한국을 위해서 최대의 호

울성이 있으며 한민족전체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민주주의 만이 우리에게서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주의의 합리성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제도는 실천하는 주체인 우리 한민족이 용기와 창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같이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쌓아 올리려는 창조적인 실천이 바로 우리의 유신대업(維新大業)인 것이다. <계속>



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과정(生成過程)과 소멸과정(消滅過程)을 검토한 다음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하고 그 대신 사회주의(社會主義)가 수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이른바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이들 이론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기로 하겠다. 「노동가치설」의 여러 원칙들은 「마르크스」가 창조해낸 것은 아니며, 이미 고전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개발(開發)된 것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이들 고전 경제학자들이 개발해 낸 학설(學說)중 필요한 부분만 따다가 자신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즉 상품(商品)의 가치는 오로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쓰여진 노동의 량(量)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필요한 노동의 량과 열마리의 사슴을 잡는데 필요한 노동의 량이 똑 같다면 한마리의 고래와 열마리의 사슴은 서로 같은 값어치를 갖고 바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마르크스」는 노동력만이 모든 가치의 원천(源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가치설」의 모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동가치설」의 첫째의 모순은, 갖가지 다른 환경과 조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을 똑같은 것으로 일률적(一律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발전하여 노동의 종류와 질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있어서도 상품생산을 위하여 쓰여진 노동의 량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더우기 모든 경제적 재화(財貨)의 가치가 노동에 의해서만 형성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노동가치설」의 둘째의 모순은,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상품만을 생각하고 그 이외의 요소들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오직 쓰여진 노동에 의하여 결정했을 뿐이며,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인 토지나 자본과 같은 비인간적인 생산요소는 전혀 무시한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품생산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동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공장을 세우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계나 상품 원료를 구입하기 위한 자본 등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여러가지 생산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품의 가치를 노동력에서만 구했던 것이며, 바로 여기에 「노동가치설」이 일반적인 경제이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잉여가치설」의 주요 골자와 그의 모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인 자본과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결합하여 상품이 생산되는 것인데 생산된 상품의 가치 속에는 생산과정에서 투하된 자본이나 노동의 가치에 비하여 더 많은 여분의 잉여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잉여가치가 이자(利子) 등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되돌아가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 자본가들은 부(富)를 쌓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생산요소 중 노동을 제외한 그 이외의 생산요소는 그 자체의 가치가 노동생산물에 그대로 이전될 뿐이지만 노동력만은 생산과정에서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즉 잉여가

치를 생산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노동력 자체의 가치는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것도 노동자들의 최소한도의 생활비(生活費)와 일치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노임(勞賃)의 고정성(固定性)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설」을 통해서 이윤의 본질을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관계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윤을 낳게 만드는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잉여가치설」의 모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잉여가치설」의 첫번째 모순은, 상품의 가치를 노동 일변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 원료, 노동 이외에도 기업능력(企業能力) 등 기타의 여러가지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에 의해서 기계(機械)나 원료(原料)들이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며 기타 생산요소들이 결합되어 비로서 하나의 상품이 생산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화(常識化)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가 오직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 가치를 독점(獨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조차도 1952년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제문제>라는 논문에서 「잉여가치설」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잉여가치설」의 불합리성(不合理性)을 지적한바 있거니와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의 비능률성(非能率性)을 지양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제도인 이윤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윤도입설」(利潤導入說)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농민들에게 소농구(小農具)의 사유(私有)를 인정하므로써 「잉여가치설」의 모순성을 스스로 인

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잉여가치설」의 두번째의 모순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될지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한도의 생활비에 불과한 선에서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런데 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노동자의 노임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生産性 賃金制)라고 하여 노임(勞賃)의 상승률을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일치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진데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이같은 18세기의 낡아빠진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을 내세워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의 노임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잉여가치설」의 세번째의 모순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오히려 「노동자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더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잉여생산물은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군사력의 강화 또는 독재정권의 유지에 사용되거나 소위 「새로운 계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탕진되고 있다.

일찌기 공산권에서 탈출한 「수잔느 라방」이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인 <공산주의 50년의 현실>이라는 책자에서 노동자 1인당 생산가치가 월 750「루블」인데 반하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125「루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는 비율은 600%나 되는 것이며, 이러한 착취율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것이라

고 예언했던 숫자보다 2배나 더한 착취율인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은 1962년 <내각> 비밀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1명의 연간 생산액은 3천원이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480원 내지 500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노동자의 착취율은 거의 800% 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전 부통령이었던 「밀로반·질라스」는 『공산주의 사회에 새로운 특권계급이 발생하여 새로운 착취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의 생활비 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기술혁신이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산업체제가 날로 다양화(多樣化)하게 됨에 따라서 「인간자본」(人間資本)이란 개념이 점점 보편화(普編化)되어 가고 있으며, 부(富)의 개념도 물질적인 부(富) 이외에 「인간에게 응결된 부(富)」가 매우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육의 멍치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간자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르크스」의 「최저 생활론」은 부당하기 이를데 없다.

2.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崩壞論)

다음은 「마르크스」가 그의 경제이론의 결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본주의 붕괴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들은 보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킨다든가 노동자들의 노임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술혁신(技術革新)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기술혁신을 하게되므로써 산업이 점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서 건물이나 기계 등 불변자본(不變資本)은 증가현상을 일으키는 반면에 가변자본(可變資本)인 노동은 감소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감소현상은 노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본을 축적(蓄積)하므로써 생산을 확장 시키고, 생산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한편 국내의 열등기업(劣等企業)들을 흡수하여 병합(竝合)하므로써 독과점(獨寡占)에 의한 생산량을 확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생산량이 확대된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술혁신 즉 기계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의 기회는 기계화된 만큼 감소되므로써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노동자들은 빈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가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빈곤하므로써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상품은 산처럼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향이 장기화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는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모순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경제공황(經濟恐慌)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가들은 국내적으로는 독점결합(獨占結合)에 의한 착취체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써 자연히 계급간의 대립이 더욱 날카

롭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간에 해외로의 자본 수출과 해외 식민지 개척을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므로써 결국 자본주의 국가간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끝내는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의 모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째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자본가의 이윤율이 줄어든다고 주장한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기호(嗜好 : 즐기고 좋아하는 것)가 점차 늘어나고 다양화해 집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 생산되고, 이에 따른 수요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우주산업(宇宙産業)이나 원자공업(原子工業)등의 발달은 날이 갈수록 더 높은 비율의 투자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할 수록 자본가의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한편, 현실적인 면에서 살펴보아도,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른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경제적인 여러가지 모순으로 인하여 이미 몰락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는 반대로 고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신 침체(沈滯)를 거듭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그들 공산국들이나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들은 산업의 기계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빈곤을 내세워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가들에게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를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노동자들이 산업의

기계화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제작 공업에 취업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발명으로 인하여 일부 노동자들이 그들의 직장을 당분간 잃어버리는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산업의 기계화로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빈곤속에서 허덕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단적이고 과장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 있어서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발전 초기의 경제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발전도상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노동과잉현상이 일어났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의 과잉상태로 부터 노동력의 부족상태로 전환되고 노동자의 임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여 우리 나라에서 만도 해마다 의사, 간호원, 광부 그리고 기타 각종 기술자를 흡수해 가고 있음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째로, 자본주의가 그의 발전과정에서 자체의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서 경제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가 붕괴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자기 모순 극복의 노력과 기능을 무시해버린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공황을 억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엄

연한 사실이다. 즉 국가는 재정금융정책(財政金融政策)을 중심으로 한 수요(需要)의 조정,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자동적으로 안정시키는 실업보험제도(失業保險制度)나 각종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그리고 누진세율(累進稅率)의 자동안정장치(自動安定裝置)등을 활용하여 공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경제공황의 발생을 억제하는 국가의 다양한 기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항상 균형이 유지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경제정책 요소가 작용하여 경기변동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몰락한 나라는 아직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의 계속적인 불균형은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불균형이라도 당장에 밖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불균형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북한의 경제현실

그러면 북한의 경제현실은 어떠한가를 그들의 주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북한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그들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중공업 우선정책(重工業 優先政策)에 두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자원(資源)을 배분(配分)하는데 있어서 「생산재」(生産財) 즉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의 원료, 제조용 기계, 차량, 선박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많은 비율의 자원을 할당하고 반면에 「소비재」(消費財) 즉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되는 재화(財貨)를 생산하는 데에 보다 적은 비율의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하며, 이렇게 자원배분을 하여야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소련에 있어서도 혁명 이후 수차에 걸친 경제계획에서 꾸준히 채택되어 왔으며, 북한도 주민들에게 극단적인 내핍생활을 강요하여 최대한도로 자원을 축적하면서 군수산업(軍需産業)을 기반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방경제(國防經濟) 체제를 가일층 굳혀왔다.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追求)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인 국민경제의 생산력 증대는 바로 국민 후생면에서의 생활수준 향상을 뜻하는 것이며, 경제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바로 국민의 소비수요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1960년대의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자의 순위(順位)를 소비재공업(消費財工業)으로부터 생산재공업(生産財工業)으로 점차 전환시키는 과정을 추구해 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를 볼 때, 그들은 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으로 거꾸로 거슬러 가는 과정을 택하므로써 산업간의 불균형은 심화(深化)되었고 전체 경제성장율은 낮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경제의 최종목

적이 아니라 주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제거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생산성을 자극하기 위한 출자에 불과한 것이며, 1인독재의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제하에 있는 북한의 경우 국민의 복지 향상이란 본질적으로 2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하나는 앞서 설명한 중공업 우선정책과 관련하여 국방(國防)과 경제의 발달을 함께 추구하는 국방, 경제 병진정책(國防, 經濟 並進政策)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의 병진정책은 1966년 10월 당 대표자 회의(黨代表者會議)에서 선언한 이래 계속해서 추구해 온 노선이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기에 공산권 내부에서 이념분쟁(理念紛爭)이 일어나서 중, 소 분쟁이 격렬해 짐에 따라서 「국방에서의 자위(自衛)」를 들고 나오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일층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의(決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의 병진정책은 실질적으로는 군사력의 집중적인 강화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967년도 북한의 총군사비는 그들 총세출액(總稅出額)의 30.2%에 달(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1970년도에 가서는 총세출액 23억불 가운데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4%로서 약 7억 3천만불에 달했고, 이같은 액수는 같은해의 북한 전체 G.N.P (국민총생산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막대한 군사비로 북한 주민의 1인당 군사비 부담율(眞擔率)은 약 54불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엄청난 군사

비의 지출은 바로 「자력갱생」(自力更生)에 의한 주민의 노동력 착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노선으로서는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 아래 자주적으로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라는 구호 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에서의 자립」(自立)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내세운 기본과제(基本課題)를 볼 것 같으면,

- ① 경제의 부문구조(部門構造)를 더욱 개선(改善)할 것.
- ② 생산부문(生産部門)과 기업소(企業所)들을 더욱 보강(보強), 완비(完備)할 것.
- ③ 생산력을 합리적(合理的)으로 배치(配置)하고 지방(地方)경제를 발전시킬 것.
- ④ 절약투쟁(節約鬪爭)을 강화할 것 등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외부와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고립정책(孤立政策)은 새로운 자본의 도입(導入)과 새로운 기술혁신(技術革新)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감퇴시키고 말았다. 즉 이러한 고립정책(孤立政策)은 1960년대에 북한이 추구한 7개년계획을 다시 3년간이나 연장하여야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이 7개년 계획을 매듭짓는 「총화보고서」(總和報告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電力)과 석탄(石炭)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겨우 목표량의 70%밖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에 있어서 10년간의 북한의 평균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은 겨우 6.9%에 지나지 않았고, 군수산업(軍需産業)을 위시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산업간의 엄청난 불균형을 더욱 심화(深化)시킨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늘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노동생산성이 아주 낮은 수준(水準)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레닌」출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소연방 최고회의에서 「브레즈네프」가 스스로 시인한 바도 있거니와 모든 공산권의 국가가 직면(直面)하고 있는 고민인 것이다.

그러나 공산권 내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북한 공산집단은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한 채 1당독재의 권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침체되어 있는 경제발전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천리마 운동」을 위시한 각종 사회주의 노동 경쟁운동을 벌여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을 높이고 책임 생산기준량(責任 生産 基準量)을 높이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경제는 봉쇄(封鎖)된 경제체제로부터 개방(開放)된 경제체제로의 전환, 기술의 혁신,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생산성의 탈피, 생산시설의 노후, 외부로부터의 자본의 도입 등 숫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우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될 합리주의(合理主義) 사상이 김일성의 권력체제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은 70년대의 전 후반을 통하여 일대 시련기(試鍊期)에 부딪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이다.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그 허구성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조국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냉혹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국토분단이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38선이란 국경선 아닌 국경선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도발로 인하여 6.25라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으며, 그 뒤 휴전 후에도 계속해서 냉전과 대립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냉전과 대립상태가 4반세기나 지속되어 오는 동안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은 무력 적화통일이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무력을 증강하는 등 전쟁준비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한편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의 적화통일 야욕을 은폐시키기 위한 평화공세를 일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국력만이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며 유일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차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성취시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력증강에 온갖 노력을 집중하므로써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진력해

왔다.

그리하여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성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70년 8월 15일 「무력대결 중지와 평화경쟁의 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8.15 평화통일 선언」을 국내외에 천명(闡明)하였고, 1년이 지난 71년 8월 12일에는 대한 적십자사로 하여금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71년 9월 20일부터 적십자회담이 열려 남북한 사이에는 분단된지 27년만에 비로소 최초로 대화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그런데 동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던 1년 간에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미.중공 접근, 미.소 접근 그리고 일.중공 국교정상화 등 평화공존과 화해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되자 언제까지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자세로 홀로 냉전체제를 고집할 수 없었던 북한측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노력을 거부하지 못하고 「7.4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민간주도의 남북 적십자회담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적십자 회담의 개최도 그러했지만 7.4공동성명의 발표와 그에 따른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 합의는 실로 우리 5천만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근 1년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우리들은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과 감격은 점차 살아지고 일종의 실망과 회의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회담에 임하는 북한 공산측의 자세와 주장이 너무도 상식에 벗어나 우리가 기대했던 동족의식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단순히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적십자회담에서 조차 공산주의의 찬양과 김일성 선전에 열을 올렸고 심지어는 이 회담에 정치성을 개입시키기 위하여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참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실망을 느낀 사건은 그들이 금년들어 세 차례나 무장도발을 일으켰고, 이제까지 잠잠했던 비난방송과 위장평화 공세를 다시 가열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무장도발과 위장평화공세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남북대화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것이며,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종의 분노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모처럼 열린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헤쳐 그들의 속셈을 똑똑히 알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북한의 기본 통일전략, 남북회담에서 그들이 노리고 있는 점, 그리고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와 주장하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저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북한의 기본 전략(基本戰略)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은 그들의 기본 목표를 공산주의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그 발전에 두고, 이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김일성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공산당(노동당)의 독재체제 강화를 전략목표로 삼았으며, 그를 위해 유

일사상체제와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는 소위 혁명노선(革命路線)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혁명노선은 그들의 특수한 기본전략이 아니고 「마르크스」, 「엥겔스」 이래의 공산주의의 기본노선인 계급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 집단보다도 가장 무자비하고도 철저한 혁명노선을 지향(指向)하여 피의 숙청과 인민탄압을 통해 유일사상 체제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혁명노선이란 『모든 행동의 원리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투쟁에 두고 반체제 세력(反體制勢力) 즉 소위 반동분자(反動分者)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하는 것은 물론 생산활동도 투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이란 「슬로간」아래 일당독재나 유일사상체제를 고수하는 혁명적 투쟁이라는 그들의 기본전략은 추호도 변동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기본전략이 변동하는 날 독재체제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보아도 틀림 없을 것이다.

모든 독재체제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혁명적 투쟁을 요구하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는 인간들에게 조금도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투쟁목표(鬪爭目標)를 제시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투쟁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채찍하는 것이 독재자의 큰 임무이며 또한 기능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독재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名分)도 그리고 인민대중의 불안과 불평을 억압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쟁목표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밝은 내일에

대한 기대의식(期待意識)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위협 요인(威脅要因)인 것이다.

이리하여 공산집단은 희망적인 목표로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천국인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내걸고, 위협요인으로서는 인민들에게 끊임 없는 위기의식(威機意識)을 고취시켜 적대관계(敵對關係)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이란 바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목적을 위해 선의(善意)의 제 3자를 희생시키든지 가해(加害)하는 따위의 불법적인 도발을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전가시킨다든가, 또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생떼를 씌으로써 인민들의 적대감과 투쟁의욕을 북돋는 등의 조작극을 다반사로 벌인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대해 감행한 그 숫한 도발과 이에 대한 책임전가나 생떼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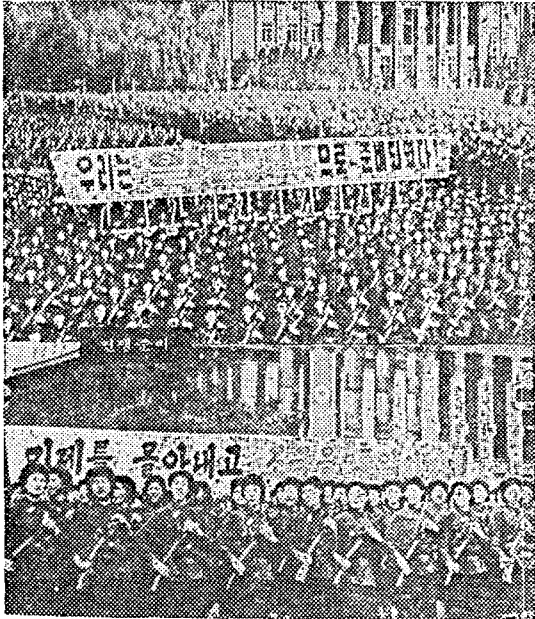
그들은 이러한 도발로 적대의식과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군비확충(軍備擴充)의 명분을 찾아 4대군사노선으로 전인민을 무장시켰으며, 독재정권을 강화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군비를 확장하고 전인민을 무장시켰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대남전략 즉 무력통일이라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본전략을 혁명적 투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반공사회체제의 붕괴 역시 혁명적인 투쟁에 의해서

만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공산화를 위한 투쟁인 소위 혁명투쟁(해방투쟁)은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공동과제이며 기본전략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북한은 무력적화 통일을 위하여 지난 10년동안 군비증강에 힘안이 되어 왔고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군사훈련에 총력을 집중해 왔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혁명투쟁에서 이러한 기본전략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을 것인가는 너무도 빠른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북한이 「소비에트」 붉은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대신 남한은 미제국주의 군대에 의하여 강제로 점령당했다고 하며, 따

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며 미군은 침략군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은 자기들의 불가피한 역사적 사명이며, 남한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바로 공산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오직 폭력에 의한 혁명적 투쟁으로서만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조국통일은 폭력혁명에 의한 남한의 공산화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의 통일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혁명통일이란 바로 무력적인 적화통일이다. 이들이 이와 같이

수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목적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억제하고 상호신뢰의 바탕과 민족적 일체감을 되찾아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기약하자는 데 있느니 만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무력적화통일 노선인 소위 「전 조선혁명」이라는 기본전략의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들의 남북대화의 응락을 과연 「남조선혁명」이라는 대남 무력침략의 기본전략인 혁명노선의 포기로 단정할 수 있는 가는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것이며, 평화통일이 이룩되는 날까지 그의 심은 결코 가셔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남북대화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우리의 제의에 응했는가 하는 의도를 파헤쳐 그들의 평화제의를 가지고 있는 허구성과 위장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남북대화에 응한 북한측의 저의(底意)와 태도표변 (態度表變)의 속셈

북한이 그들의 통일기본전략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남북대화에 응한 것은 진실로 그들이 혁명통일이라는 기본전략을 포기하고 참다운 평화통일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남한의 여건변동 등 다각적인 상황판단에 입각하여 대남혁명이라는 그들의 통일 기본전략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남북대화에 응한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가를 국

제정세, 북한의 대내정세, 그리고 그들의 전략전술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국제정세가 냉전체제에서 평화공존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언제까지나 홀로 냉전체제의 장벽 안에서 고립해 있을 수는 없고 세계정세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60년대에 들어와서 중. 소분쟁이 격화되자 양쪽의 틈바구니에서 고심하면서 이쪽과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식의 외교를 전개하다가 68년에 들어서서는 중립을 택한다는 소위 「자주노선」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도 격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와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공산주의 국가 이외의 서방국가로부터라도 경제 및 기술협력이나 기타의 지원을 유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서방 자유 세계로부터 경제협력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때맞은 우리의 남북회담 제의는 북한으로서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북한의 산업은 해방 당시만 해도 한국전체의 90%이상이나 북

한에 있었고 이러한 기반을 통해 중공업을 개발하여 왔으나 그것은 낙후된 시설과 기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군수분야만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업생산력보다 훨씬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실리추구의 현 국제사회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업시설이나 기술의 근대화는 물론 소비재 생산이나 경공업 분야의 개발 역시 추구해야만 되겠는데 그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나 시설 및 기술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이러한 그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정지작업으로서 필요 불가결하다고 그들이 판단하였을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세째, 그들이 판단하기에 우리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이나 지하당 구축 등 적극적인 남한의 적화기도는 현 단계로서는 대한민국의 증강된 국력이나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승산이 없으므로 이를 중지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혁명사상」을 대한민국에 침투시키는 전술적 전환이 자기들의 혁명전략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속셈은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조차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거나 정치선전을 하는 그들의 회담태도에서도 너무도 명백하게 들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최근에 이르러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대남 비난방향을 재개하며 위장평화 공세를 다시 시작하는등 태도를 포변하여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현재와 같은 남북 대화를 계속해 보았자 그들이 기대했

던 전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애당초 그들은 남북대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에다 소위 혁명의 기풍을 불어 넣어 보려고 기대했으나 그와 반대로 오히려 10월유신으로 더욱 철통같은 안보 태세가 확립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둘째, 남북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남한에서는 여론이 들끓게 되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폐기 등 공산주의가 침투하는데 유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초기에는 국회에서는 떠들석 하더니 오히려 10월유신으로 반공체제가 더욱 굳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한 데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면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점에서 유리해져서 국제진출이나 자유세계에의 접근 특히 일본과의 접근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다지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네째, 남북대화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는 합의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합의한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업무에 들어가게 되어 조만간에 남북교류가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남북교류를 통해 자기들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겠다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고 남북대화를 깨트리기에는 뚜렷한 명분도 없을 뿐더러 현재로서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우선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려,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시간을 번 다음 남북교류나 남북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태세를 정비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종합적인 평가를 다시하고 국제정세의 추이를 기다리는 것

이 옳겠다고 판단하였는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속셈을 타진할 때 현재 그들의 일련의 도발은 남북대화를 교착시키되 적반하장격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므로써 대내외적으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6.25 남침사실까지도 왜곡시켜 「6.25북침」 운운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이 남북대화의 교착화를 위한 하나의 상투적인 공산당식 술책인 것이다.

4. 평화통일론의 허구성(虛構成)

남북한은 7.4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온 민족앞에 서약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이 역사적 합의를 충실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 이후의 북한 동향을 살펴보면 진실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래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적 통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북한은 통일의 문제를 혁명의 문제로 보고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한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노선이란 공산화의 통일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남한에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혁명을 「남조선 혁명」이라

고 부르고 있으며, 공산화 통일을 「전조선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1958년 4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명백히 판명되었고, 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대회와 65년 10월 노동자 대표자회의 등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72년 7월 3일 평양방송을 통해 자기들의 본래의 평화통일 개념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이다. 이 방송에서 그들은 현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며 「남조선 혁명」을 수행해야만 비로소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조선 혁명」은 오로지 폭력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동 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겠다는 속셈을 미리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7.4공동성명 이후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의 진의는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민족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예 외면하고 소위 그들의 혁명전략의 견지에서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쟁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예를 들어, 남북적십자 회담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서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흩어진 가족을 재결합하여 주자는 우리측의 주장과는 달리 엉뚱하게도 반공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문제를 들고 나와서 회담의 진전을 가로 막는 것이다.

7.4공동성명에서는 평화통일 원칙의 하나로 남북간의 이념, 사상 및 제도를 초월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념이나

체계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도 서로 다르므로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이러한 것을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남북한 관계는 조금도 진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적십자회담에서 이념이나 체제에 관한 정치적인 문제를 관여시킨다는 것은 인도적인 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7.4공동성명 이후에도 자기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고 또한 가장 정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참다운 평화통일에 성의를 갖고 있다면 행동으로써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의 자세가 본질적으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들은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조선혁명」을 선동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동포에게 한국에 대한 적대감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전쟁준비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남북대화 부진의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시키는 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외교활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73년 3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몇일 앞두고 북한측이 감행한 제주도 근방인 우도의 무장간첩선 출현, 중부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4월 17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에 의한 소위 「남조선혁명」의 기도를 중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같이 호전적이며 반민족적인 자세에서 어떠한 평화통일 제안을 하든 그것은 객관적인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당면과제는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더전 위에서 쉬운 문제부터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하고 그 업적에 기초하여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문제까지도 풀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방법은 남북한의 현실적 여건에 비취볼 때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현시점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아직 해결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커다란 정치적 문제를 내거는 것은 공론에 불과하며 성의있는 태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북한측의 허세는 종래부터 그들이 되풀이 해오고 있는 위장평화공세의 계속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평화통일 제의가 무력남침을 위한 연막전술이나 한국의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위장전술이라는 것을 6.25를 통해서 잘 알았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자기들의 평화통일 제의가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기본전략을 변경해야 하며, 그 증거를 온 민족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당의 배타적인 가치관과 공산주의의 호전성 때문에 자기들의 기본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평화통일 제의가 성실치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북한의 위장된 평화제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의 폭을 넓혀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동포들과의 접촉의 길을 열어 북한 고위층의 반민족적인 태도를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우리의 자세(姿勢)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본 통일전략이 무엇이고, 남북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속셈과 그들이 제의하는 평화통일론의 허구성이 무엇인가를 파헤쳐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북한 공산측의 기본전략에는 하등의 변동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국민적인 각오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첫째, 우리는 북한의 기본전략에 하등의 변동도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고 그들의 위장평화공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겠다.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조절위원회의 개최 등 4반세기나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장벽이 뚫리고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들의 감격과 기대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던 초기에 성급한 사람들은 당장에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것이라고 들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1년 간의 대화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표리부동한 위장평화 공세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감격과 기대감에 넘쳤던 우리의 심정은 점차 냉각되고 실망과 회의감마저 느끼게 된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인도적인 적십자회담에서 조차 김일성 선

전 등 정치선전을 일삼았고, 또한 남북공동성명에 위배되는 비난과 비방을 전개하고 무력도발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은 군비축소나 미군철수 등 종전과 다름 없는 위장평화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건대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행동은 모두가 그들의 기본전략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는 위장된 평화공세라는 것을 다시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 각자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장평화공세에 현혹됨이 없이 오늘의 역사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자주평화통일의 이념에 투철해야 하겠다.

둘째, 우리는 끈기와 인내로서 남북대화에 협조하고 총력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해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총매진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가 어렵고 또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의 대화는 대화없는 대결보다도 더욱 힘들고 장기간에 걸칠 것이라는 사실에 예견하고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대화라 할지라도 대화를 통한 자주,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대화의 과정에서 어렵고 험난한 고비를 맞고 있으나, 앞으로의 대화과정에서는 보다 더 어려운 고비에 부닥치게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에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온 국민이 인내성있게 남북대화에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력안보태세의 총화를 위해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데 전 국민이 매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남북대화에 협조하는 길이다.

국력을 배양하고 국력을 조직화하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려는 것이 10월유신의 이념이라고 할진대 우리 국민이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유신과업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국민적인 각오와 자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하겠다.

평화통일 외교정책 (平和統一 外交政策) 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 (特別聲明) <전문>



박대통령각하는 1973년 6월 23일 역사적인 평화
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앞으
로 지향한 통일외교의 지표를 국내외에 천명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 대화의 경험과 국제
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與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闡明)하고자 합니다.

제 2차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國際聯合)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 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 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遼遠)해 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 측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날 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容易)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치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 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선결(一括先決)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 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放置)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深化)와 긴장의 고조(高潮)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초(基調)로 하는 열강(列強)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強靱)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直視)하고 평화를 이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傾注)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은 서로 내정(內政)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단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련총회에서 의「한국문제」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

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리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속에서 민족의 위신(威信)과 긍지(矜持)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失望)이나 좌절(挫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 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邁進(邁進)합시다.

1973年 6月 23日

대통령 박정희

북한 의 농촌



초라한 백화점의 한복 진열장
 도시에 있는 백화점이 이렇진대 농촌
 의 상점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1. 농촌의 상점(商店)

북한의 농촌에는 1개 이(里)에 1개소씩 농민의 소비 조합상점(消費組合商店)이라는 것이 있어 협동농장 관리 위원회가 직접 경영하고 있었으며, 군소재지(郡所在地)에 있는 도매관리소(都賣管理所)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상부에서 결정한 값으로 팔고, 그 이익금은 농장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64년 2월에 이러한 농촌 소비조합상점을 모두 국영관리(國營管理)로 개편하고 아무런 보상

(報償)도 없이 몰수하여 <국유화(國有化)>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농촌 상점의 <국유화>는 결국 그 만큼 농민의 재산을 수취(收取)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상점에서 얻은 이익금도 당연히 북한 공산집단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농촌의 국영상점은 해당 이(里)에 대한 비료(肥料), 농기구

(農機具), 농약(農藥), 건설자재(建設資材), 기타 생활필수품(生活必須品)이나 일용품(日用品)등 일체의 물자공급(物資供給)을 취급하게 되므로써 농민의 생활과 협동농장의 명맥을 장악하게 되었다.

우선 이러한 국영상점의 기능을 살펴보면, 작업복, 고무신, 학용품, 간장, 된장 그리고 간단한 기구 등을 팔고 있으며, 그 외에 고기, 기름, 두부 등 1년에 몇차례에 걸쳐 주는 배급물자의 공급을 한다. 또한 결산분배(決算分配)에는 농민들에게 분배될 현금을 빠른 시일안에 거두어 들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즉, 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가 임박해지면 재봉틀, 가구, 시계 등 비교적 값비싼 물건을 가져다 놓고 농민들에게 이를 사도록 유혹한다. 재봉틀 1대의 값은 북한 화폐로 350원 내지 400원인데 이는 백미 10가마의 수매(收賣) 값과 같은 가격으로서 노력자각은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간에 분배 받은 현금 전부를 내어도 재봉틀 1대를 사기가 힘든 것이다.

시계는 소련제 17석짜리가 150원, 북한에서 생산해 낸 탁상시계가 60원 내지 100원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이당위원장(里黨委員長)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많이 받은 농가에서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담배는 25세 이상의 남자 1인당 하루에 평균 여덟 가치씩 계산하여 판매하며, 설탕은 그 양(量)이 부족하여 탁아소(託兒所)와 유치원(幼稚園)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장원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농촌상점의 중요한 기능은 수매사업(收買事業)인 것이다. 즉,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을 최대한도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

여 농촌상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연부락 단위로 소매상점을 확장시켜 수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즉, 군수매사업소(郡收買事業所)의 위탁(委託)을 받고 수매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탁수매라고 하는데, 이를 상점에서 하게 되며, 이 때에 상점의 상품과 교환도 할 수 있다. 상점에서는 각 작업반을 순회하면서 이동판매(移動販賣)를 하는만큼, 이 때에는 수매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수매(移動收買)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里)에 있는 상점은 군수매소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2. 농장원의 휴일(休日)



소위 <모내기 전투>에 동원되어 일하러 가는 북한 농민들, 이들은 사실상 연중무휴로 각종 강제 노동에 동원되므로써 마음놓고 휴식할 틈도 없다.

북한의 농민들이 1년중 휴식을 할 수 있는 날이란 양력 설날인 1월 1일, 김일성 생일날인 4월 15일, 「메이 데이」 즉 노동절인 5월 1일, 광복절인 8월 15일, 북한 창건일인 9월 9일과 그 외에

협동농장에서 정해진 휴일 등 모두 합쳐서 ' 불과 10여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한때 농촌에서는 도시와는 다르게 일요일 대신 1개월에 3일간을 휴일로 정한 바도 있다. 이는 각 협동농장의 실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10일, 20일, 30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작업반 10일계획>이라고 해서 각 작업반마다 10일간의 작업을 일단 결말을 짓고 다시 10일간의 작업계획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 협동농장은 10일간의 작업계획 달성 여부를 반드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리위원회는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10일간씩 <총화>(總和: 일정한 기간중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에 따라서는 5일, 15일, 25일로 휴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계획량을 초과달성하여 9일만에 끝내야만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농장원이 쉴 수 있는 날이라고는 혹독한 추위와 폭풍 등으로 밭이나 논에서의 작업이 전혀 불가능한 때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놀게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만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동작업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벌(責罰)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휴식은 3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소장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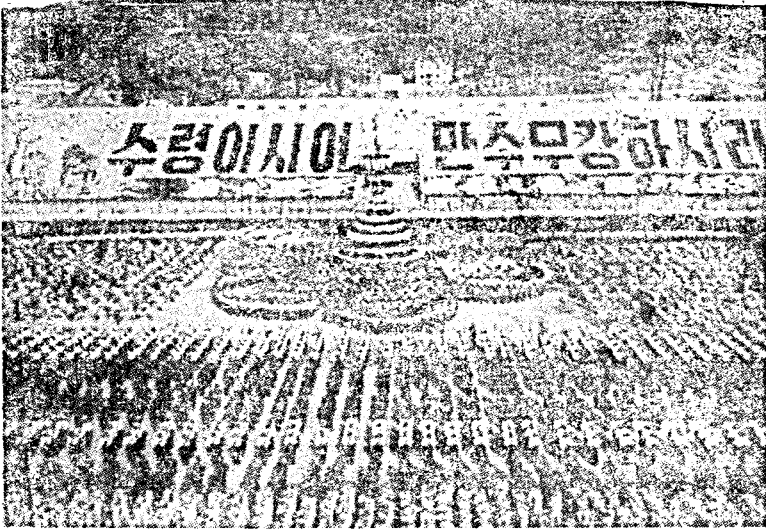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휴식들은 <천리마작업반 운동>(千里馬作業班

運動)등으로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으며 북한 공산집단은 사실상 연중무휴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한계(限界)가 있는 법이며 노동력을 재생시키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북한의 농촌노동은 그렇지 못하다.

197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북한 공산당 제5차 당대회에서, 농촌의 농장원들도 도시의 노동자들과 같이 8시간 노동제 실시와 정기적인 휴일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 노동자들도 10여시간씩 혹사(酷使) 당하고 있으며 일요일 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이러한 약속은 농장원들을 달래고 구슬르는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3. 농촌의 명절(名節)



북한에서는 설이나 추석보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 더 큰 명절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날에 벌어지는 대대적인 축하행사에 전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킨다.

옛부터 농촌에서의 명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설날과 추석날을 들 수 있으며, 보통 설날에 있어서도 양력보다도 음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음력정월에도 쉬지 못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음력정월은 농장에서 영농준비(營農準備)에 분주한 때로서, 퇴비반출(推肥搬出)이나 소토작업(燒土作業: 흙을 태워서 비료로 만드는 작업) 등에 동원되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추석(秋夕)은 근래에 와서 단 하루만 휴식(休息)케 하여 성묘를 허락하고 있다 한다. 물론 과거처럼 햇곡식으로 떡이나 술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풍년을 노래하는 풍악놀이, 달구경을 하는 풍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추석날을 쉴 수 있게 한 것은 옛풍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농장원들에게 어느 정도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그 날의 휴식을 위하여 몇일전부터 작업책임량(作業責任量)을 초과수행하여야 한다. 즉 추석날 못하는 일을 추석 전날까지 미리 해치워야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우리 나라에서 옛부터 내려오고 있는 한식(寒食), 단오절(端午節) 등도 없어진지 오래됐다. 동지(冬至)날의 팥죽이나 1월 15일의 오곡밥 나물음식 등은 옛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명절을 의식적으로 없애버렸다. 즉,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명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절을 그대로 인정하면 옛사회를 그리워하게 되며 공산당이 정해놓은 명절(경축일)이 상대적으로 격하(格下)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명절보다는

5·1절(국제노동절), 4월 15일(김일성 생일), 9·9절(북한 창건일) 10월 10일(공산당 창건일) 등을 더 큰 명절로 삼고 있는 것이다.

4. 농민들의 오락(娛樂)

북한에 있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집단노동(集團勞動)을 하며 집단생활을 하고있기 때문에 자기의 취미에 맞는 오락을 택할 수 없고 오직 집단오락에 참여하는 수 밖에 없다.

활쓰기나 바둑 등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으며, 다만 장기만이 숙직실이나 선전실 등에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팽이치기, 제기차기, 연 띄우기 등은 6·25동란을 계기로 완전히 없어졌다.

그 밖에 널뛰기, 그네뛰기, 고니두기, 윷놀이 등의 오락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풍년을 구가(謳歌)하며 환희에 찬 율동으로 농민생활을 자랑하던 농악(農樂)놀이는 북한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포전선전대(圃田宣傳隊)와 기동선전대(機動宣傳隊)가 순회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와 춤 등을 마지못해 배우며, 드문드문 이동영사대(移動映寫隊)가 와서 상영해 주는 「뉴스」나 문화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뿐이다.

농민에게 가장 즐거운 벗이 될 수 있었던 막걸리는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옛날이다.

또한 농한기에는 노동적위대(勞農赤衛隊)훈련과 각종 회의에 동원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겨울철 한때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과 같이 이야기책을 읽으며 장기와 바둑을 두는 평화스럽고 여유 있는 생활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농장원에게 시간이 있게 되면, 작업반 또는 관리위원회 부근에 있는 민주선전실(民主宣傳室)에 가서 김일성 혁명전통을 교양시키기 위해서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거나 혹은 판에 박은듯이 되풀이 하는 선전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5. 농촌의 위생(衛生)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농촌의 위생문제를 크게 들고 나온 것은 1964년부터이다. 사실 그전부터 위생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써왔으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농촌의 위생문제까지 생각할 여유(餘裕)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농촌에는 각종 토질병(土質病)과 전염병(傳染病)들이 만연되어 매년 수백명씩 사망하며, 폐결핵이나 「지스토마」등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할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영양 부족과 고된 노동에 의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의 위생관계는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농촌에는 「지스토마」환자가 많은데,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의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농민들 속에 이 환자가 많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 한때 「지스토마」의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균(菌)의 매개물인 가재를 잡는 운동을 전개한 사실도 있었다. 이 가재 잡기 운동은 전 농촌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이에

동원된 사람은 주로 학생들이었으며, 평양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전 의학계통의 학생들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학교수업을 전폐(全廢)하고 약 2개월 동안 동원되었는데, 독로강(禿魯江)상류, 청천강(淸川江)상류, 토질병 환자가 많은 부락(部落)의 개울 등을 샅샅이 훑어 가재를 잡았다. 그리하여 강계(江界) 주변에서만도 약 50가마의 가재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온 개울마다 널려있는 가재를 모두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군다나 이러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스토마」의 감염을 방지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농촌위생에서 가장 주(主)가 되는 문제는 농민들에게 위생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위생계몽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앙에서는 <위생선전사>(衛生宣傳社)를 신설하여 위생관계 서적들을 발간케 하고 군소재지에 있는 위생방역소(衛生防疫所)의 위생선전부, 위생선전실, 치료예방기관, 농업근로자동맹의 대중위생선전원, 과학지식보급협회의 선전원 등을 총동원하여 농민들에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위생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봄이나 가을에는 농촌위생월간(農村衛生月間)을 설정하여 집안 또는 변소 등 환경청소와 목욕, 이발, 세탁 등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생월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기가 일쑤인 것이다.

최근에는 모범위생군(郡), 모범위생리(里) 창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모범위생부락을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실행조항(實行條項)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있으면 환자가 생기지 않

게 방지하여 농장원 모두가 일할 수 있게 되므로써 생산계획을 초과하여 달성시키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모범위생부락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반이 위생면(衛生面)에서 월등하게 우수하여야 하며, 모범위생군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里)가 모범위생부락이 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평안북도 창성군(昌城郡)을 대표적인 모범위생군으로 선정하고, 이 군(郡)의 모범을 따르라고 독려(督勵)하고 있다. 창성군을 모범군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곳에 김일성의 별장(別莊)이 있는 관계로 창성군에 대한 <현지지도>(現地指導)를 여러차례 한 바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모범위생군을 각 도(道)마다 하나씩 표본으로 만들게 하여 이 모범위생군(郡)이나 모범위생이(里) 창조운동에 전체 농민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서의 전염병(傳染病) 예방사업(豫防事業)으로서 는 군(郡)마다 <예방접종대>(豫防接種隊)라는 것을 조직하여 각 이(里)에 파견하고 있다. 파견된 예방접종대원은 이(里)에 있는 진료소(診療所)와 합동으로 농장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그 부작용(副作用)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예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방주사를 맞은 다음 부작용 때문에 작업에 참가하지 못하면 그 만큼 노력점수를 적게 따게되며, 이렇게 되면 결산분배 때에 분배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모범위생군(郡)의 창조운동이 나오게 되자 각 이(里)에서는 목욕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郡) 소재지에 하나씩 밖에 없는 목욕탕을 각 이(里)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사무실 부근에 「드럼」통을 펴서 솔처럼 만들고 물을 덥혀서 목욕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옷을 벗는 탈의실(脫衣室)같은 것이 있을리 없으며, 목욕은 날짜를 정하여 작업반별로 하게 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원들이 목욕을 하자면 연료를 자기작업반에서 가져다가 우물물이나 개울물을 펴서 데워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불비(不備)한 시설(施設)에다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봄이나 가을에 실시되는 위생월간 기간 중에만 한두번 정도 이용할 정도이다.

이발소(理髮所)는 각 이(里)소재지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협동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발소의 이발사는 결산분배 때에 농민과 같이 분배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발요금은 협동농장의 수입(收入)으로 들어가며, 이발소의 시설비(施設費)로 쓰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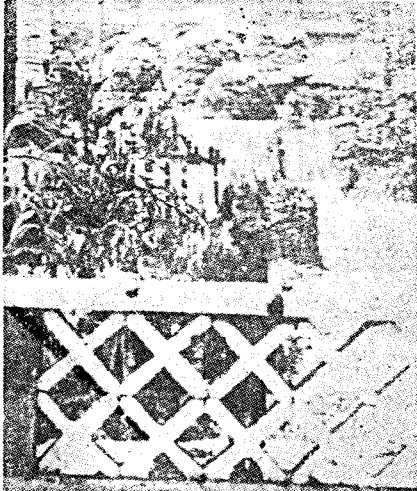
이러한 이발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발사의 자격심사(資格審査)도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개 자작자가 아닌 사람이 경험만으로 이발을 하고 있다.

먼 곳은 작업반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발소를 이용하는 매우 불편하며,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휴일(休日)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발을 하는데, 수요(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발사가 이발도구를 가지고 작업반별로 순회하면서 빈터나 사무실 또는 밭 등에서 이발을 하여 주고 있다.

이발사는 하루동안 몇명까지 이발을 해주어야만 한다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그들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기준작업정량을 완수해야 하므로 당연히 질(質)보다 양(量)에 치중하게 되므로 섬세한

이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발소에서는 본인이 직접 머리를 감어야 하며, 기름은 물론 그밖의 어떤 「서비스」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6. 농촌의 주택(住宅)



획일적인 북한의 농촌 주택

6·25동란 동안 북한에서는 약 60만동(棟)의 주택이 파괴(破壞)되거나 소실(燒失)되었으며, 그 중 농촌에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대부분이 토굴이나 반토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휴전후 평양을 비롯한 도시의 건설에만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도시건설은 소위 <국가예산>으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협동농장이 주체(主體)인 만큼 농민들의 부담으로 집을 지어야만 했는데, 농민들은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도 없었으므로 흙벽돌을 만들어서 조합내에서 한두채씩 집을 지어야만 하는 실정에 있었다. 그러므로 1961년까지만 하여도 심각한 주택난 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 공산집단은 1962년부터 각 군마다 농촌건설대(農村建設隊)라는 것을 조직케 하였다. 이 농촌건설대는 각 협동

농장에서 주택건설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여 200명 내지 250명 정도로서 조직된 것인데, 이 건설대는 군인민위원회(郡人民委員會)의 지시에 의해 각 이(里)를 순회하면서 농촌주택을 짓는 것이다.

이 농촌건설대가 집을 짓는 대상에 있어서는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서, 큰 길가나 철도주변의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집을 짓게 되어 있으며 산간벽지의 농촌은 제일 마지막 순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농촌건설대가 집을 짓는데 있어서 전개된 운동이 바로 <1인 4세대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대원 한 사람이 1년에 4세대 비율로 집을 짓도록 하는 운동이다. 처음에는 1인 3세대 운동이었으나 몇몇 열성분자(烈誠分子)들의 선동에 의하여 1인 3.5세대 운동이 되었고, 다시 1인 4세대 운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1인 4세대 운동이 전개되므로써 100명으로 구성된 건설대의 경우에는 연간 400세대의 집을 지어야 하며, 이것은 월평균 34세대가 되는 셈인데, 건축시기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월평균 60-70세대의 집을 지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과중한 노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렇게 지은 집이 영성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만 계산하고, 계획하며, 그나마 집단생활이 용이하도록 한 곳으로 집중(集中) 시켰다. 평지에는 경작지(耕作地) 칩해라 하여 못짓게 하고 야산이나 산기슭에 몰아 지었기 때문에 집과 농토와의 거리가 심한 경우에는 2km나 떨어져 있는 경우조차 있다.

문전옥토(門前沃土)라는 옛말도 있듯이 집 근처에 농토가 있어 야 수시로 돌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1964년부터는

농촌건설대가 지은 농민주택은 모두 <국가부담>으로 하고, 농민들은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과 같이 집세를 물면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은 부족한 형편이며 매년 10만세대의 농촌주택을 건설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 주변 농촌의 농민에만 배당되는 실정이다.

북한 농촌의 주택은 농촌건설대(農村建設隊)가 일정한 설계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구조(構造)나 내부시설이 모두 똑같다. 즉, 방 두개에 부엌이 한개씩으로 한동에 두세대씩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고, 집단생활(集團生活)에 알맞도록 주택이 모여있다. 지붕은 천연「스레트」, 또는 판조각 등으로 되어 있어 면에서 보면 문화주택(文化住宅)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볼때, 오늘날 북한의 농민들은 농토도 자기 토지가 아니고 집도 자기 집이 아닌 농업노동자로 전락된 셈인 것이다.

7. 농촌의 여행(旅行)



돈이 있어도 양권이 없으면 한그릇의 밥도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양권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협동농장원인 북한의 농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건(與件)이 구비(具備)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있어서 계획량을 달성해야만 한다. 즉, 남자는 연간 230점, 여자는 180점을 따도록 노동을 해야만 하며 의무노동 일수를 월별로 계산하여 이를 달성한 농장원 만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둘째, 여행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족 및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거나 병으로 입원하는 등 몇가지 규정 이유가 있을 때에만 여행이 허가되며, 또한 그 이유가 틀림 없다고 증명(證明)이 되어야만 한다.

셋째, 여행을 하는 동안 사고(事故)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認定)되어야 한다. 협동농장원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분 불량자(成分不良者) 및 감시대상자(監視對象者)가 상당한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독(單獨) 여행을 시켜도 아무런 사고(예를 들면 도망을 가는 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농민들은 이러한 세가지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여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구역(制限區域)이 많다. 그것은 전쟁준비로 인한 군사상의 보안을 유지하자는 목적에서이다. 황해도를 비롯한 해안지대와 자강도(慈江道) 및 양강도(兩江道)의 일부 지방은 엄격한 여행 제한 지대로 되어있다.

이러한 여행 제한지역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공무여행(公務旅行)이 아니면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행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행절차를 살펴보면 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여행목적, 행선지, 여행기간 등을 분조장, 작업반장, 관리위원장들에게 먼저 신고(申告)하고, 이(里)에 주재(住在)하고 있는 사회안전원(社會安全

員 : 우리의 경찰과 같음)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안전원은 신고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토한 후에 이당위원장(里黨委員長)과 합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의견서와 함께 신고서류를 군사회안전부(群社會安全部)에 발송한다.

군사회안전부에서는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의심스러우면 여행목적지에 조회(照會)까지 하여 확인한 후 이(里)에 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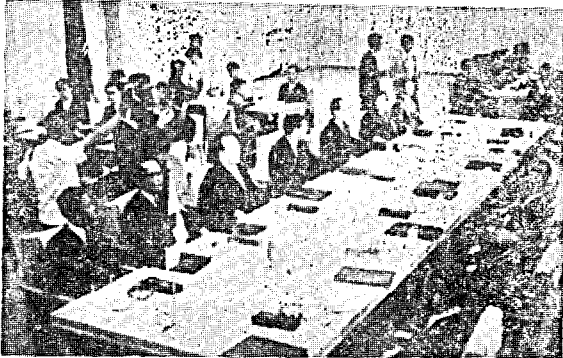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승인되면 이(里)에 주재하고 있는 안전원이 여행증을 발급(發給)하여 주는 것이다.

여행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일 600g(약 4홉)씩 계산하여 백미와 잡곡을 각 50%씩 군인민위원회 상업부(郡人民委員會 商業部)에 가져다 주고 대신 여행기간 동안 자기가 먹을 양권(糧卷)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군병원(郡病院)에 가서 위생검사증(衛生檢査證)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여행증명서에 기재된 행선지 이외의 지역에는 별안간 불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농민들은 이와같이 까다로운 조건(條件)과 절차(節次) 때문에 특별히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제 7 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73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 대동강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광경

7차 남북적십자회담 첫날 회의가 박대통령의 6·23평화통일 외교선언 이후 새로운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73년 7월 11일 상오 10시 평양 대동강회관에서 비공개리에 열렸다.

남과 북의 인도주의 사절들을 지난 5월달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회담 이후 약 두달만에 다시 마주 앉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주는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상호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협의했다.

정주년 한적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첫날 회의는 11일 상오 10시부터 48분간 계속되었다. 한적 대표단은 의제(議題) 제1항에 관한 쌍방간의 상이한 입장을 좁히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적 대표단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傾注)했으며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

했다.

한적 대표단 일행은 첫날 회의를 마친 뒤 오후에는 공연을 관람하였고 저녁에는 북적 중앙회가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쌍방 대표단과 자문위원은 지난 6차 회담때와 변동이 없었으며 두번째 회의는 12일 상오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렸다.

첫날 회의가 열린 11일 상오의 평양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 안개가 끼었으며 3-7m의 북동풍에 기온은 최고 섭씨 31도 최저 21도로 서울보다는 약간 서늘한 편이었다.

한적 대표단 일행은 이날 상오 9시 15분 숙소인 보통강(普通江)여관을 출발하여 천리마(千里馬)거리-서성거리-인민군 거리-중앙 거리-옥류교를 거쳐 9시 30분경 회담장인 대동강 회관에 도착하였다.

대표단 일행이 회담장으로 가는 동안 보통강가에 있는 피마자밭에는 잎을 따는 여자들의 모습도 보였으며, 거리를 달리는 「버스」안에서 대표단을 향해 손을 흔드는 어린이도 있었다.

평양거리는 대체로 한산한 편이었으나 지난 1·3·5차 회담때 보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열을 지어 합창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은 대체로 남자는 검정 또는 회색바지에 흰남방을, 그리고 여자는 검정 또는 회색치마에 하얀 반팔 「부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10일 하오 평양에 도착한 한적 대표단 일행은 숙소인 보통강 여관에서 북적 단장인 김태희(金泰禧)를 비롯한 북적 대표 및 자문위원들의 영접을 받았다.

그런데 제7차 남북적 회담을 마치고 귀경(歸京)한 이범석 한적 수석대표는 13일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결과를 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 한적 이범석수석대표(右)가 북적 단장 김태희의 영접을 받고있다.



13일 하오4시30분 이범석 한적 수석대표는 제7차 남북적 평양회담을 마치고 귀경, 한적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표 하였는데 이범석 한적 수석대표는 『추석 성묘 방문단 제의는 의제1항—제5항까지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수석대표는 북한측이 『남한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 환경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사실상 한적측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표는 『추석 성묘 방문단 구성 문제 토의를 위해 쌍방 대표 2명과 실무자 3명씩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고 그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이 수석대표는 『한적측의 이같은 새로운 제의와 인도주의 및 적십자 정신에 입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적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이 조만간에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잘라서 말했다.

이 수석대표는 북적측으로 부터 『적십자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왕래하는 인사가 반공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면 아예

없어버리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적십자회담의 합의에 의해 가족을 찾아오는 것과 무력전복 및 교란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자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자들은 법치국가에서는 위법자로 처단되어야 하다』고 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수석대표는 『날이 갈 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담이 힘들어 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표단에 주어진 사명이 막중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가는 길에 북적도 동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간위 제 31-5-37 호 심의필

통 일 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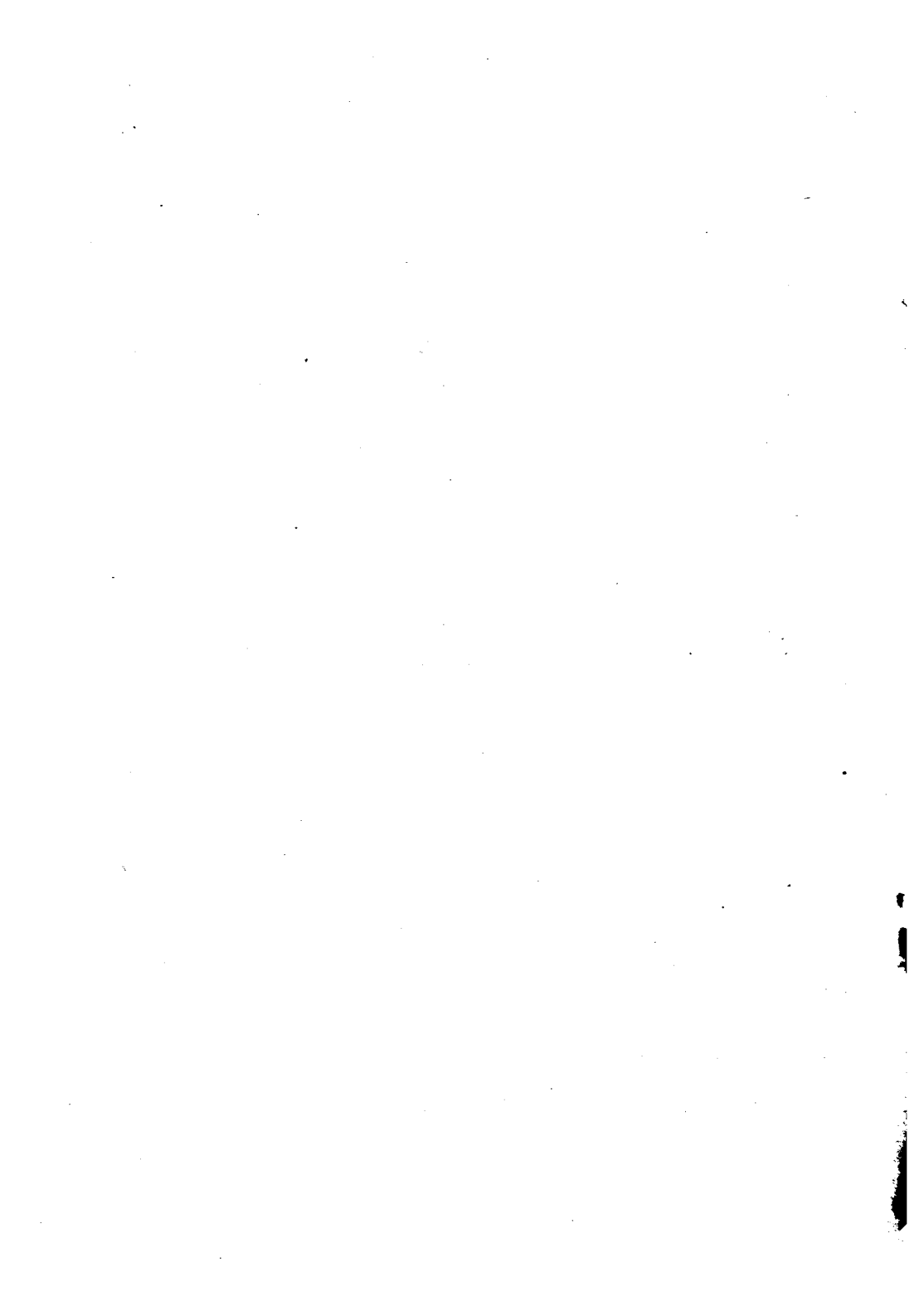
1973년 10월 일 인쇄

1973년 10월 일 발행

발 행 : 국토 통일원(교육홍보실)

인 쇄 : 대 광 인 쇄 공 사

<비 매 품>



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리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질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속에서 민족의 위신(威信)과 긍지(矜持)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失望)이나 좌절(挫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 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邁進)합시다.

1973年 6月 23日

대통령 박정희

